

법제처, 김영란법 '3-5-10 규정' 수정하나

5개부처 참석 정부입법 정책협의 개최키로

법제처는 2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대로 김영란법 시행령안 논의를 위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의현 행정법제국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정부입법정책 실무협의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법제처는 보도자료에서 "수수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부처별로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부·해수부·산림청은 이날 실무협의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공무원 행동강령(2003년)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 3만원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후 물가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농수축산업계 및 임업계 등 유관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가액"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청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등 민간에 대한 파급효과, 내수 침체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익위는 "유관 업계를 포함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및 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기준으로 정당한 사회 구속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 전반에 플러스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맞섰다. 법제처 관계자는 "수수(授受) 가능한 음식물 등의 가액 기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처별 판단이 다르고, 이에 대한 이견이 있음을 확인했다"며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법제처 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개최해 쟁점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 품목에서 농축수산물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상의 식사 및 선물 금액 기준을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농식품부 등은 법제처에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한 바 있다.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는 법령안에 대한 기관간 법리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

다. 이 협의회는 법리적 사안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사안이 아닐 경우 국무조정실 등으로 조정 업무를 넘기게 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 관계자는 "식사와 선물 가액 기준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를 통해 해결할) 법리적 문제인지에 대한 결정을 오늘 실무협의에서 내린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회의 논의를 통해 국무조정실로 넘겨 조정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나 국무총리실 등의 차원에서 김영란법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박대통령 "경제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을"

靑 국무회의... "추경·사드 시급"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분야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

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다른 것과 연계해서 붙잡고 있지 말고 국회가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기를 거듭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탄두 미사일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상황인데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국민의당 다시 조기 전대론... 박지원 "기다려달라"

의총서 호남의원 중심 제기 박준영 영장기각에 "환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경선에 들어가면서 민심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국민의당에서도 조기 전대 주장이 다시 나오고 있다. 2일 개최된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주승용 의원은 "최소한의 당헌·당규 개정을 하고 서울에서 '원샷'으로 대표를 빨리 뽑아서 대선 모드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인화 의원은 "전대가 늦으면 대선 준비도 늦어지니 늦어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엔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황주홍 의원은 "박지원 위원장의 결단만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가면 지리멸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와 맞물린 비대위원장-원내대표 겸직 논란도 이어졌다. 유성엽 의원은 "총선 직후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한 반면 오세정 의원은 "겸직 분리를 하는 것은 국민 관심 바이고 근본적인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전대를 당기는 것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겸직 문제만 전대와 분리해서 해결하자"며



“심기일전 합시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4차 의원총회에서 전날 검찰이 수역 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기각된 박준영 의원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절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달 말 로드맵을 갖고 전대 개최 시기와 겸직 문제를 결정하겠다"며 "정기국회 중에도 전대를 하자고 하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 1일 박준영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또 기각된 것과 관련,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

2野 '공수처' 공조... 주내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이번 주 내에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 더민주 민주당의 회복 태스크포스(TF) 간사인 박병계 의원과 국민의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주 의원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두 야당은 지난달 각각 공수처 법안을 발표한 뒤 지난주부터 논의를 거쳐 수사대상과 처장 자격요건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합의안에 따르면, 두 야당은 수사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으로 하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수사개시 요건으로는 국민의당의 제안대로 재처 국회의원 10분의 1(30명) 이상의 연서가 있을 경우 수사를 시작하도록 했다. 애초 더민주의 원내 교섭

정세균 의장 "추석 이산가족 상봉 모색해야"

정세균 국회의장은 2일 "인도적 관점에서 올해 추석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나아가 정례적인 상봉을 전향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고령 이산가족 가정 방문과 관련해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 시간이 없다. 매년 3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화상 상봉·서신교환·생사확인, 명단교환 등 낮은 수준의 상봉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산가족 상봉은 남북 상호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의 시발점이자 여

새누리 당권 친박-비박 진영 대결

친박 이정현 단일화 가능성

새누리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모두 단일화를 추진하는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양 진영 간 대결구도로 흐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차례의 합동연설·TV 토론을 거치면서 이주영·이정현 후보는 친박계, 정병국·주호영·한선교 후보는 비박계의 지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각 진영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친박계에서는 3일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2차 합동유세를 마치고 나면 이주영·이정현 후보 가운데 한쪽으로 지지가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정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앞세워 우위에

섰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영남권을 정치적 기반으로 한 새누리당에서 호남 출신인 이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있다. 한 친박계 의원은 이날 "친박계 차원에서 두 이(李) 후보 중 어느 쪽을 지원할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며 친박계 핵심으로 꼽히는 최경환 의원이 귀국하는 오는 4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비박계 주자들은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반감과 '공천 개입 의혹' 때문으로 유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탓에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용태 의원의 단일화를 이뤄낸 정병국 후보의 주도로 주호영·한선교 후보까지 포함하는 추가 단일화가 모색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힘을 얻는다. /박지경기자 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